후반기, 종책모임 재편 속 '격론'

1면에서 이어짐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후반기는 종책모임 지형이 재편되는 가운데 종헌·종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비구니 법계위원이 처음 탄생하는 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와 장로대종사 신설 등을 담은 종헌 개정안은 잇따라 부결됐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로 회의장을 옮기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특히 임기 마지막 해인 2026년에는 임시회 두 차례가 성원 미달로 무산되면서 종책모임 간 대립도 표면화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022년 11월 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8대 중앙종회 개원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개원식 후 기념촬영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선우회 · 정법회 출범…지형 변화

후반기 중앙종회는 원구성부터 이전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2024년 11월 열린 제232회 정기회에서는 주경 스님이 49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의장단 선출이 합의가 아닌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것 역시 종회 내부의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줬다.

앞서 제232회 정기회 개원을 앞둔 10월 24일에는 성로·제정·법원·보인·해량·덕림 스님 등이 참여한 선우회가 출범했다. 선우회는 중앙종회가 입법·대의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창립 취지로 내세웠다.

2025년 8월에는 화엄1·2·3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법회가 출범했다. 정법회는 종헌·종법 개정과 중앙종회의 입법·대의 기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종책질의 등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2026년 들어 선우회와 함께 '공감과 미래'라는 연대 형태로 움직이면서 중앙종회 내 세력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는 종책모임 간 입장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여야 구도도 선명해졌다. 다만 이러한 구도가 제19대 중앙종회에서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동화사 총림 해제…교구 · 종회 갈등

후반기 초반에는 동화사 총림 해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중앙종회는 2025년 3월 제233회 임시회에서 팔공총림 동화사를 총림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제9교구본사 동화사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긴급 발의된 안건으로, 73명이 투표해 찬성 50표, 반대 23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림은 6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동화사는 총림 해제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중앙종회 역시 동화사의 대응을 비판하는 담화문을 내면서 양측의 갈등이 커졌다.

2025년 6월 제234회 임시회에서는 동화사와 관련한 부당·해종행위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됐다. 특위 구성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지만, 정회와 속개를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동화사특위는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인사권과 금전 수수의 정황 △교구 현안(팔공총림 해제)과 연계된 서명 강요 및 조직적 동원 △재정·회계 관리의 구조적 부실 및 투명성 결여 등을 담은 보고서를 11월 236회 정기회에 제출했다.

화재로 긴급 대피…회의장 변경도

후반기 종회 운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수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였다.

2025년 6월 10일 제234회 임시회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던 중 화재가 발생하면서 의원들이 긴급 대피했다. 이후 회의는 조계사 불교대학 교육관으로 옮겨 속개됐다.

당시 의원들 사이에서는 회의를 바로 폐회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사·결산검사 등 시급한 안건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거수표결 결과 55명 중 35명이 찬성하면서 일부 안건을 처리한 뒤 회기를 단축해 폐회하기로 했다. 종헌 개정안과 종무보고, 종책질의 등은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18대 중앙종회는 2022년 11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26회 정기회를 열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화재 복구가 이어지면서 제235회 임시회와 제236회 정기회는 봉은사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회의장 변경은 회의 일정과 안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법계 자동 품수…종헌 충돌 논란

법계법 개정도 주요 논쟁이었다.

제236회 정기회에서는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스님이 자동으로 법계를 품수하도록 하는 법계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종사·명사 법계 품수 요건을 갖춘 스님이 3000명을 넘는 상황에서 특별전형에 따른 심사 부담을 줄이고 법계 품수 절차를 정비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종헌 제28조가 원로회의에 2급 이상 법계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어 종헌과 개정 법계법 사이에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문제는 제19대 중앙종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제237회 임시회에서는 대종사보다 상위 법계인 '장로 대종사'를 신설하는 종헌 개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대종사 위에 상위 법계를 두는 방식에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찬성 23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사면 · 복권 첫 시행…원로의원 6명

종단 내부의 징계와 권리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사면·경감·복권도 처음 시행됐다.

제236회 정기회에서는 2018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면·경감·복권 동의안이 상정됐으며, 총 10명에 대한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권리가 제한됐던 수불 스님이 복권됐고, 제적 징계를 받은 선각 스님은 사면·복권됐다.

원로의원 추천도 이어졌다. 후반기 동안 보광·장윤·도명·도법·영담·정완 스님이 차례로 신임 원로의원에 추천됐다.

대립 속 두 차례 임시회 무산

제18대 후반기의 마지막은 안건 처리보다 '성원' 자체가 문제가 됐다.

2026년 3월 열린 제237회 임시회는 종책모임 간 치열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며 종회 내 긴장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6월 제238회 임시회는 재적의원 81명 가운데 24명만 참석해 개원 정족수 41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7월 제239회 임시회 역시 22명만 참석하면서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공감과 미래' 측은 총무원장 선거가 있는 해에도 임시회가 열린 전례를 들어 종회 개최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대 측에서는 임시회 소집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사전에 의견을 모아 집단적으로 불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감과 미래'는 종회 무산 이후 총무원장 스님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이후 중앙종회의 책무가 멈췄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앙종회 성원을 촉구하며 단식 정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새롭게 구성될 제19대 중앙종회에는 종헌·종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이견이 큰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제가 남았다.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고 종단의 제도를 다듬으며, 종책모임 간 합의점을 찾아가는 입법·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김내영 기자

비구니 참종권 확대 '한 걸음 더'


2022년 9월 15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32차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제18대 중앙종회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비구니 종회의원들은 5000여 비구니 스님의 목소리를 종단 의사결정 과정에 전달하는 한편, 비구니 승가의 참종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을 기울였다.

첫 공식 선거…책임 · 대표성 높여

18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조계종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그동안 전국비구니회는 관례적으로 비구니 종회의원 10석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종회의원 자질과 책임성을 넓히고 보다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누구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처음 실시된 선거에는 13명이 입후보했다. 9월 15일 제3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후보자 정견 발표와 투표가 진행됐다. 후보자들은 비구니 권익 향상과 승가교육 및 복지체계 개선, 종단과의 소통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투표 결과 교학·수행 분야에서 진상·철우 스님, 포교 분야 정운·혜도 스님, 복지 분야 정관·지인 스님, 행정 분야 법해·설해 스님, 사회·문화 분야 혜성·진명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입법 · 종책질의로 활발한 의정

종회의원 스님들은 비구니 승가의 권익 향상뿐만 아니라 종단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 종책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3월 열린 '역대 비구니 종회의원 간담회'에서 공개된 활동 자료에 따르면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은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 등 종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해, 이 가운데 2건이 통과됐다. 또 전국비구니회와의 연계 활동을 비롯해 종단 및 대외활동, 각종 간담회와 특별면담 등 활동 내역도 43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역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종책 활동을 모색한 것도 의미가 크다.

법계위원 신설…제도적 성과

18대 종회의 가장 큰 성과는 종단 최초의 비구니 법계위원 탄생이다.

2025년 3월 제233회 임시회에서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사에 비구니 법계위원 3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계법을 개정했다. 이어 제234회 임시회에서 본각·계호·광용 스님의 비구니 법계위원 위촉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종단 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법계위원이 탄생했다. 이는 비구니 승가의 수행 특성과 경험을 종단 제도·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계위원 참여는 19대 과제로

반면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는 끝내 풀지 못한 숙제가 됐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을 비롯한 59명의 의원이 발의한 종헌 개정안은 비구니 관련 사건을 심판하는 초심호계원에 비구니 호계위원 2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제235회 임시회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종헌 자구의 정합성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월됐다. 이후 비구니 종회의원들은 종단 각계 스님들을 직접 찾아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동의를 구하는 등 적극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제236회 정기회에서 실시된 표결에서 재적의원 81명 가운데 75명이 투표해 찬성 53표, 반대 22표를 기록했다. 종헌 개정에 필요한 54표에서 한 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제237회 임시회에서도 찬성 37표, 반대 38표로 또다시 부결되면서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는 19대 종회의 과제로 남겨졌다.

여수령 기자



